



인민혁명당 당사 앞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있는 몽골 국민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의 몽골과 캄보디아를 가다

글 · 나효우 nahyowoo@gmail.com

이번 아시아 민주주의 연수프로그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교류협력프로그램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몽골 그리고 캄보디아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민간외교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몽골과 캄보디아 방문은 올해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해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제 교류의 장을 확대해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새로운 선거제도에 혼란스러운 몽골

지난 6월 25일, 몽골 총선을 참관하고 민주주의 관련 단체들을 방문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인천공항에 모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몽골 방문이 처음이어서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였다. 그 긴장감은 몽골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되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가 조금 넘었지만 백야현상으로 거리는 그리 어둡지 않았다. 시내에 들어오는 동안 6월 29일 선거일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건 선거 홍보물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머문 호텔은 작지만 깨끗한 새 호텔이었다. 그 아담한 호텔은 유구한 역사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몽골을 정리되지 않은 채 한곳에 뒤섞여 놓은 듯 겹은 잘 꾸며져 있지만 시스템은 뒤죽박죽이었다. 우리 일행이 방에 냉장고가 없다고 지나가듯이 호텔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날로 새 냉장고를 사들여오는가 하면, 마지막 날 호텔비를 계산할 때는 전산 시스템이 고장 나서 애를 먹이기도 했다.

빠른 변화에서 오는 혼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당,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해부터 소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유권자인 국민들과 선거 후보자도 새로운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 '정치교육 아카데미'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한반도 크기의 일곱 배가 넘는 몽골에는 인구 2백 70만 명, 공식으로 정부에 등록된 NGO단체들만 5천여 개가 넘는다. 등록된 단체들이 모두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되어 있다. 마치 울란바토르 시내,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거대한 공룡 화석처럼 비대한 몸집에 비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은 미흡해 보였다.

몽골은 러시아 10월혁명의 영향을 받은 하급관료·지식인 등으로 몽골 인민혁명당을 결성했다. 이들은 1924년에는 군주제를 공화제로 고쳐 국명을 '몽골 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봉건적 잔재의 일소, 재산 사유권 금지 등을 규정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소련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1980년대 말, 동구유럽의 사회주의 몰락 이후 민주화로 재산과 땅의 사유화가 이뤄지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 왔다.

'용감함'이라는 뜻을 지닌 부족명에서 기인된 '몽골(Mongol)'은 개혁 개방 이후 오히려 부정과 부패, 도시와 농촌의 격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이 나타면서 사회적 불만이 쌓여갔다. 그리고 몽골 역대 선거 사상 처음으로 총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몽골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폭동으로 5명이 죽고 329명이 다쳤으며 718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단순히 부정선거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사회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6·29 선거가 끝나고 잠정 집계된 선거 결

몽골 여성연합 방문, 여성문제를 어떻게 정치사회에 반영할 것인가 선거를 앞둔 이들의 고민이다.



과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7월 2일은 우리 참가자들,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해 토론을 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초청자 중에 민주당과 몇몇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인민혁명당 참가자들과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그동안의 선거 부정 사례를 조목조목 발표하였다.

인민혁명당사에 불 지른 몽골 인민들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를 제외하고 대다수 많은 지역이 유목민들의 전통가옥 '게르'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선거인명부 작성에 적지 않은 시비가 항상 뒤따르

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제한되고 있으며, 당연히 선거는 기존의 행정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권여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행정의 최하위 지방에서 지방 공무원들의 관권 선거 개입은 노골적이었다. 집권 여당 인민당에 못지않게 제 1야당인 민주당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관권, 금권선거 사례가 발표되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소수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인민혁명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는 속보가 전달되었다. 토론회 중간 쉬는 시간에

몽골 정치아카데미에서





몽골의 투표 용지

텔레비전 생중계로 항의 시위 장면이 중계되었다. 몽골 인민들이 인민혁명당 당사에 몰려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마침 저녁식사 레스토랑이 혁명당사 부근이라 자연스럽게 시위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1천여 명에 가까운 시위대가 인민당에 항의 표시로 당사 앞 깃봉에 여당 깃발을 내리고 자기 소속 정당의 깃발을 올리고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성난 군중의 불만은 불길처럼 커졌다. 경찰들이 진압을 강하게 시도할수록 저항 시위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리고 날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한번 터진 군중의 성난 민심은 불길처럼 번졌고, 인민혁명당사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날이 더욱 어두워지면서 이제는 고급 승용차들이 지나가도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부정선거는 그동안 쌓인 사회적 불만에 불을 붙인 격이었다.

시위가 격화되자 몽골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대를 진압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몽골 선거관리위원회가 6·29 총선 결과를 발표했다. 총 26개 선거구에서 7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23곳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66명 중 여당 몽골인민혁명당이 과반수인 39석을 획득하였으며 최대 야당 민주당은 25석을 차지했다. 총선 전 민주당 의석은 23석, 몽골인민혁명당은 39석이었다. 미확정 선거구 3군데를 포함하면 인민혁명당은 5석이나 6석을, 민주당은 2~3석의 의석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권 여당의 승리가 확인된 것이다.

캄보디아 국민들, 23년 장기집권 훈센총리에

또다시 힘을 실어주다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빈곤 국가의 오명을 떨쳐내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어가는 캄보디아 총선(7월 27일)을 참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다. 1993년 첫 선거 이래 네 번째로 치른 선거로서 하원 123개 의석을 놓고 11개 정당이 경합을 벌이며 810만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다.

선거 결과는 훈센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전체 123석 중에서 90석, 제 1야당인 삼랭시당(SRP 26석), 지난해에 인권을 기치로 새롭게 창당한 신진 야당 인권당(HRP 3석)이 차례로 의석을 차지하였다. 훈센총리는 이로써 23년째 장기집권에서 향후 5년의 임기를 보장받아 아시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반면 기존의 왕당파라 할 수 있는 푼실펍당(FUN), 라나리드당(NRP)이 각각 2석을 차지함으로써 왕당파는 몰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인민당의 총선 압승 가능성은 이미 지난해 처음으로 시도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98%가 넘는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킴으로써 나타난 바 있다.



캄보디아 제 10야당,
삼랭시 당(SRP)의 선거 유세

지난해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민들이 나를 원하면 아흔 살까지 총리를 하겠다.”고 했던 훈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리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프놈펜 시내를 다녔다. 저녁 9시 무렵, 때마침 제 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삼랭시당이 자신들의 상징인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었다. 퇴근길에 지나던 수백 여 명의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마중 나와 박수로 호응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훈센총리의 장기집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청년층들이 많았다. 하지만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이 표로 연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야권이 분열된 데다 되풀이되는 정책제안으로 국민들에게 대안정당의 이미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창당한 신생정당 인권당은 삼랭시당에 대해 “진정한 야당이 되려면, 정당 이름부터 고쳐라”고 주문했다. 삼랭시당 이름을 당 대표 이름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비판 말이다. 반면 오랫동안 인권활동 실천으로 신망을 받아왔던 ‘김 소카’가 새로 세운 인권당(HRP)은 초기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아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오히려 야권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캄보디아, 지난달 27일 총선 투표에 유권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선거인 명부를 대조하고 있다.

▼ 캄보디아, 선거가 끝나고 투표소에서 곧 바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집권의 훈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베트남, 태국과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훈센총리는 강온의 외교력을 발휘하여 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바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힌두사원 프레아 베헤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킴으로써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태국군과의 군사대치 상황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소집을 요구하는 등 ‘힘 있는 총리’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이뤘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5월, 프놈펜을 방문한 태국의 탁신 전 총리가 훈센 총리 자택을 방문했다는 점을 들면서 탁신 전 총리와 훈센 총리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정치적인 복원과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는 태국의 탁신 전 총리와 안보위기 의식과 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선거를 활용하고자 했던 훈센의 이해가 서로 맞았을 것이라 보고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탁신은 지난 5월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대규모 자본을 투입, 태국 국경에서 가까운 캄보디아 코롱주(州)에 금융지구, 항구 등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훈센 정부의 총선 승리에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유엔 주재 아래 진행되고 있는 크메르루주 잔당에 대한 국제재판이 이제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 세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부패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이 개방되면 될수록 늘어만 가는 빈부격차의 문제다. 여기에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해소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SAU*